

종합·해설

'박근혜 정부' 조직 18개 부처 예상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신설 대선공약 약속

대검 중수부 폐지…“5년짜리 안도계 신증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과 관련,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조직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미래 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의 규모는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ICT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 폐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을 통해 줄어든 정부 규모를 활용시키는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4일 "3개 부처를 신설하면 18개 부처가 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규모"라며 "새누리당은 내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박 당선인의 조각(組閣)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한 '하드웨어'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정부부처 내 기능과 업무영역 조정이 이뤄질 여지도 크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는 포괄적 방위역량 증강과 외교안보정책의 혼선 방지 위해 컨트롤타워적인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새총리의 내각 통합에 과거보다 큰 권한이 부여된다면 자연히 총리실의 기능도 강해지고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에 통합된 과학기술 분야가 신설 조직으로 이관되고, 지식경제부 업무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ICT부가 만들어진다면 방송통신위원회(하드웨어), 경기부(소프트웨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등에 흩어진

관련 업무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해양과 수산 업무를 나눠서 관掌하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농어촌공사는 농촌공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검찰 조직도 축소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 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교육·안전·복지 분야 공무원을 단계적

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해당 부처는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을 3개 부처 증가로 그칠지, 아니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진단을 거쳐 폭넓이 변화 단연할 수 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부 출범 전 한꺼번에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박 당선인이 일단 3개 부처 신설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장·단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대재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임기 후반에 있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5년마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5년짜리 정부 조직이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책임총리제 도입·비서정치 넘어서기

■ '박근혜 정부' 역대정부와 차별화 어떻게?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조각·청와대 비서진 인선 등에 과거 정부와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임총리제 도입되나=지금까지 책임총리제에 가장 균접한 모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 모델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박 당선인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정권 등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쇄신안을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헌법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의 태우리 안에서 권력을 적절히 분산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 당선인이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허용하며 국정을 운영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비서 정치 넘어서나=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는 역대 정부에서 논란거리였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즐근들에 의존하는 '비서정치'는 내각의 정상적 가동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권한이 막강한 비서실장은 공공연히 '왕(王)실장'으로 불리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 공약 핵심이 총리와 관장에게 인사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서정치 보다는 내각 위주로 정부를 운영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임 정부 끝고 남아가나=역대 정부에서는 전권 출범과 함께 전임 정부의 정책적 잘못이나 특혜에 메스를 가해 관련자를 처벌, 민심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특별 감사,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이명박 정부의 참여정부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감사 등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민생이 급한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있는가"라고 말한 점도 그가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관계자들이 컴퓨터 등 비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김광두·김영세·최경환 물망

■ '박근혜 정부' 첫 경제수장은

유승민 등 요직 맡을 듯… 일부선 이용섭 주목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첫 경제수장은 이관수에게 관심이 쏠린다.

산총 70% 재건 프로젝트,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읊리고) 공약, 경제민주화 등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선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간 박 당선인과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방향 수립·조정, 예산을 비롯한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이 밖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부처 사령탑 후보로는 김

광두 원장을 우선 끊을 수 있다. 서장대 명예교수인 김 원장은 이번 대선 때도 힘찬경제주진단장을 맡아 경제공약 마련을 주도해 왔다.

연세대 김영세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5인 공부모임의 멤버로서 박 당선인을 자문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내 경제통 인사들이 경제분야 지휘봉을 잡을 수도 있다. 3선의 원인은 노무현정권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건설교통 장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때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책통이다.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초선인 이종훈 의원 등 당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인사들,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인 안종범·강석훈 의원 등이 경제분야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경제통 인사들이 경제분야 지휘봉을 잡을 수도 있다. 3선의 원인은 노무현정권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건설교통 장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때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책통이다.

인터넷 패스트트랙 '나는 꿈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했던 정 전 의원은 선거법상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앞으로 '정치 토크콘서트'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전봉주(52)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출소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 흥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25일 0시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인터넷 패스트트랙 '나는 꿈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했던 정 전 의원은 선거법상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앞으로 '정치 토크콘서트'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인터넷 패스트트랙, '나는 꿈수다'는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